

농협-포스코 신입사원
농촌 일손 돕기 나서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는 지난 16일 수확철을 맞아 경기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서 포스코그룹 신입사원 110여명과 함께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을 통해 농촌에 일손을 보탬 것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포스코 신입사원들은 포도 가지치기, 포도밭 비닐 걷기, 고구마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했다.

박지훈 포스코 인재창조원 리더는 "포스코그룹은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봉사활동을 통해 힘을 보태고자 하며, 신입사원들이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선한 영향력의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민 농협중앙회 지역복지여성국장은 "수확철을 맞은 농가가 일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포스코 신입사원들이 농가에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농협은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단체·개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文케어’로 건강보험 적립금 4년 뒤 고갈된다

비급여 항목 급증... 2028년 적자 10조
문정부서 재정악화, 건보료 인상 불가피
“朴정부가 쌓은 재정건전성 文케어로 탕진”

민주 맘대로 국감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비가 전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新) 의료기술이 매년 나오는데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 한 해 평균 수십 개씩 늘어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정책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 때문에 전 국민의 2017년 3650개에서 문재인케어 시행된 이후인 2019년 4108개로, 2년 사이 458개가 늘었다. 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건수와 급여비는 2017년 130만4000건에 2661억원에서 2019년 335만6000건 5964억원으로 촬영 건수는 157%, 급여비는 124%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 때문에 전 국민의 50%가 넘는 2800명이 실손보험(비급여 항목 보장)에 가입해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된다”고 꼬집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개인실손보

험금 지급현황은 2017년 6조4753억원에서 2019년 9조4638억원으로 2년 사이 3조원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에 고갈되고, 202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000억원에 달하고, 4대(고용·건강·산재·노인장기요양) 보험 중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며 “문재인케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고령화에 비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지출을 증가하는데 징수규모는 줄어든다”며 “이제 와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경제 사정이 수년째 좋지 않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용의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로 계속 급여화해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큰 병원에서는 급여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작은 병원에서는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성원 기자

속으로 넣고 그 속에서 진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늘어나더라도 전체 총 진료비를 줄이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령화 대비를 못하기에 문재인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문재인케어가 잘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재정건전성을 높여준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정책이 원래 계획대로 잘 가는 것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준 박근혜 정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립금을 상당히 여유있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도 추진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문재인케어는 박근혜 정부에서 쌓은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쓸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가 더 투입되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가계 의료비 경감효과가 있었다며 비급여 항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주민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 주민이 유방암 수술 후 열 번의 항암제를 맞았는데, 주사가 급여화되면서 1000만원 낼 것을 200만원만 주고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과다진료와 과다검사 등 비급여 항목을 억제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은 저 병원 좋다 그러면 우리 르 몰라가고, 약도 이 약국 저 약국 들러 집에 (많이) 쌓아놓는데,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인 경로당 등에 약·담뱃을 설명하는 내용을 붙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newlight@newdaily.co.kr

OS 탑재방해·앱강요·통행세... 공정위, ‘갑질’ 구글에 칼뎠다

네이버 이어 ‘공통 플랫폼’ 불공정 제재
‘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위법도 대상

구글코리아가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는데 이어 구글코리아 역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해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 플랫폼’ 갑질은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 구글이 발표한 인앱 결제 수수료 일방 부과 위법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주요 쟁점은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이다.

이 가운데 운영체제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는 공정위가 2016년부터 직권으로 조사해온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 중 하나이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받았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용자의 관심이 큰 게임업 중 일부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윈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이나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이 그 예다.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의무 부과 방침도 뜨거운 감자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방식을 도입, 결제액의



임재현 구글 전무, 사진=시장경제신문DB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수수료 30% 부과는 통행세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견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식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정위는 신청 접수 전이라고 해도 그 위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유진 기자 amy311@meconomynews.com

절끔절금 등교 확대에 우유업계 ‘한숨’

부분계학으로 공급망 끊겨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1단계로 완화되면서 학교급식도 정상화될 조짐이다.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방학기간인 12월과 7·8월을 제외하고 8개월 동안 학교급식으로 소비되는 우유는 하루 280만팩, 560t 규모로 국내 총 원유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 우유급식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은 70% 급감했고, 영업손실은 300억원에 달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매일 등교로 급식이 확대됐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안정화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이 확대되면서 침체를 맞은 ‘우유업계’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방학기간인 12월과 7·8월을 제외하고 8개월 동안 학교급식으로 소비되는 우유는 하루 280만팩, 560t 규모로 국내 총 원유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 우유급식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은 70% 급감했고, 영업손실은 300억원에 달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매일 등교로 급식이 확대됐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안정화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줄었던 ‘급식’

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가맹·건설·제조·대규모유통·대리점·약관 등 다양한 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상처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히 구제해드립니다.
분쟁조정 무료상담 ☎1588-1490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개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대상 원스톱 종합 지원
대표번호 1855-1490